

연구총서·2002 - 06

노동자정당의 이념과 목표에 관한 연구

강 명 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
책머리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동문제의 해결은 결국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해결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필수불가결의 기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이제 한국민주주의의 발전과 노동자권익향상을 위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은 최근의 정치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조응하는 적실한 정치활동방향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전환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2002년의 대통령 선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한국노동운동과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한국노총이 기여할 바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천만 노동자를 위하여 동시에 국민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주화를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에서는 소속 조합원들의 정치적 지향을 모아내어 한국정치의 한 주체로서 노동계의 정치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이번 연구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출간은 이러한 과제해결과 방향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출간과 함께 앞으로 더욱 더 한국노총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를 맡아주신 세종연구소의 강명세 박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연구가 노총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남 순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내용	2
제 2 장 노동자정당의 건설역사	5
1. 유럽 노동자정당의 건설	5
2. 독일 노동자정당의 건설	6
1)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태동	6
2) 노동자정당의 탄생	6
3) 독일제국의 탄생과 사민당 탄압	7
4) 사민당과 노조의 강화	7
5) 1차 세계대전과 사민/공산주의의 결별	8
6) 바이마르와 나치하의 노동자정당	9
7)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민당의 재건	10
8) 사민당의 대중정당화와 도약	11
9) 사민당의 집권화	12
3. 이탈리아 공산당(PSI)과 노총(CGIL)의 건설	13
1) PSI와 CGIL관계의 전통과 노조의 분열	13
2) PCI와 CGIL의 분립화과정	16
3) 정권참여와 노동계의 양보노선	18
4) 최근 PSI와 노동계의 정치적 역할	19
4. 스웨덴 노동자정당의 건설	22
1) 사민당의 노선변화	22
2) 사민당과 노동진영의 협력관계	25
3) 사민당과 LO의 향후 진로	28

5. 한국의 노동자정당의 건설과정	31
1) 진보정당운동의 발단	31
2) 한국전쟁이후 제3공화국 이전의 진보정당	32
3) 제3공화국하의 진보정당	32
4) 1987년 이후의 진보정당건설	33
제 3 장 독일 노동자정당의 목표와 정책	35
1. 사민당의 이념적 배경	35
2. 사민당의 목표	36
1) 공동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국제 사회	36
2)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정책	37
3)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사회	38
4) 환경과 인간을 위한 경제	38
5)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39
6) 남녀와 노소, 독일인과 외국인의 평등과 연대	39
7) 개인의 자유와 의회민주주의	40
8) 폭넓은 개혁연대 형성	41
3. 사민당의 기본적인 입장과 정책	42
1) 시장과 계획	42
2) 국민경제의 민주적인 조절	43
3) 공기업과 사회적 소유	44
4) 노동자의 경영 참여	45
5) 노동자의 생산자본 참여	46
6) 노동시간 단축	46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46
제 4 장 한국 노동자정당의 현실과 지지기반	48
1. 노동자정당 발전의 저해요인들	48

1) 동서냉전의 이념적 갈등요인	49
2) 정치체도의 제도적 제약	50
3) 지역균열과 지역갈등	51
2. 노동자정당의 지지기반	52
1) 노동시장과 정치시장	52
2) 한국노동의 선택	53
3) 노동자정당의 지지기반	55
제 5 장 한국 노동자정당의 이념과 목표	59
1. 한국 노동자정당의 현실	59
2. 세계사적 조류	60
3. 한국 노동자정당의 이념과 목표 제언	61
제 6 장 결 론	63
참고문헌	64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현재까지 한국에는 실질적 의미의 노동자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 지지도를 고려할 때, 천만 이상의 공장 노동자가 지지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정당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체제이다. 시장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사회당 또는 노동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은 한 사회의 정치적 균열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기능적 균열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는 사회당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15개국 가운데 12개국에서는 사회당이 단독 또는 다른 정당과 연합으로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최근까지 유럽연합 13개국에서 노동자정당이 국가권력에 참가하였으나 오스트리아의 극우정당이 부상함에 따라 12개국으로 감소하였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열악한 남미에서도 오래 전부터 사회당 등 친노동 정당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는 두 가지 분야에서 시민권을 행사한다. 첫째 노동은 일차적으로 작업장에서의 경제행위를 담당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작업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노동은 작업장을 조직화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꾀하여 왔다. 조직화의 형태는 시대 및 국가에 따라 규모나 수준은 다르지만 노동은 언제나 자신에 유리한 조건을 위해 조직화를 추구하였다. 간단히 말해 작업장 민주주의는 노동시장의 민주주의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요구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와 불가분

의 관계에 놓인다. 자본주의 자체가 국가의 사회적 및 경제적 체도에 의존하여 왔다. 따라서, 노동은 국가권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명이 아니라면 정당을 통한 정치적 조직화만이 국가권력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이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동시장과 정치시장의 민주화는 국가별 편차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함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방향에서의 조직화가 먼저 시작되었든, 결국에는 두 가지 민주화가 모두 달성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노동자정당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정당의 출현은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노동자정당의 역사는 이미 백년이 넘는 만큼 선진국 노동자정당들의 건설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걸맞는 노동자정당의 지지기반과 정치적 지형을 살펴보고 노동자정당이 어떠한 이념과 목표로 유의미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선진국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동세력은 노동시장을 조직하고 이로부터 정치시장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밟았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노동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진출 또는 정당체제와의 연계는 보편적이다. 노동과 정당의 결합은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는 현상이다. 서구의 노동운동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 때문에 결국 정당을 건설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첫째, 노동자정당은 노동자를 작업장 안팎에서 조직화시키고 '계급의식'을 형성시키는 주요한 제도이다. 노동자가 아무리 노동시장 내에서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면 국가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노동자정당은 노동조합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사안에 대한 고도의 일관성을 지녀야 하며 또한 노동조합은 조합 내의 특수한 이해보다 노동자정당과 그것의 전반적 전략을 지지해야 한다.(Venezuela 1992; 60-61).

노동시장만 조직화되고 정치시장이 조직화되지 못하면 노동은 작업장 내의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실업연금을 포함한 복지 등 장기적 이익을 확보할 수 없다. 일반적 복지는 노동자의 이익에 두 가지 방식으로 관련된다. 경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노동의 경제적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의 수급에 효과를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차적 관심사인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준다. 물가정책은 실질임금의 높낮이를 결정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에 영향을 준다. 노동자정당이 없다면 노동세력은 경제정책의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두 번째, 노동자정당이 현실적인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청년 실업자 등 잠재적 노동자나 노인과 같은 노동시장 퇴출자 등의 이해를 결집하여야 한다. 노동은 언제나 잠재적 실업상태에 직면한다. 노동법을 위시한 노동제도는 최종적으로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노동조합이 작업장에서 사용주를 상대로 맺은 각종 계약이 효과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회 내에 노동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이 없다면 노동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당의 기능은 사회 내 다양한 이익을 조직하고 표출하는 유일한 제도적 통로이다. 그러나 노동자정당이 의회내의 세력이 되는 데는 기성제도의 높은 장벽을 통과해야 한다. 장벽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세력 내부에도 발견된다. 역설적으로 외부 장벽이 주어진 조건이라면 내부 장벽은 전략적으로 초월 가능한 것이다. 이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다룰 것이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에 있어서의 노동자정당의 건설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독일 사민당의 발전과정과 정책들을 소개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정당에 대한 관계들을 비추어보고, 제4장에서는 노동자정당의 지지기반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5장에서는 노동자정당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살펴본 후 제6장에서 한국형 노동자정당의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제6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 2 장 노동자정당의 건설역사

1. 유럽 노동자정당의 건설

현재 유럽 각국의 노동자 정치운동의 나라별 특성과 편차는 1920년에 그 형태가 완성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은 영국의 패권하에 유지되었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질서가 동요하는 거대한 변혁의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각국에서는 자유경쟁적 자본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노조 조직률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고, 중요 국가에서 노동자 정치 조직이나 정당이 결성되었다. 그후 노동자정당이 일부 국가에서는 집권을 하기도 하였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정치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정당의 이념과 노선, 노동자정당이 기존의 정치사회나 정당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 노동자 정치의 특성 등은 그 이후 별로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형성된 각국 정치구조와 정당구조는 그후 현재까지 유럽 노동자 정치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이러한 서구의 노동자정당이 정치시장을 조직화해나가는 작업은 투표권 획득이라는 선거제도의 개혁투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제도 개혁은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산업화는 민주주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노동계급은 경제적으로는 유권자이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이들은 1860~70년부터 1910~20년 동안 약 50년에 걸쳐 투표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시기 유럽의 중요 국가인 독일, 이태리, 스웨덴의 기존 제도 정치구도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졌고, 각국의 사정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1) 김동춘, “유럽에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초기과정” 발표자료 인용

2. 독일 노동자정당의 건설

독일의 사민당은 독일 정당 가운데 가장 전통깊은 정당이다. 무려 135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사민당은 흑심한 시련과 난관을 무릅쓰고 자유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싸웠으며, 어떤 다른 정당보다 확고한 자세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실현에 기여했다.

1)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태동

19세기 들어 본격화된 산업화와 인구증가는 30개가 넘는 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사회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중적 빈곤이 발생했다. 지역 정부들은 통일국가의 수립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써 격렬한 정치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최초의 조직화된 노동운동이 출현한 것은 전 유럽의 지배체제를 뒤흔들었던 1848~49년 시민혁명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이 시기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한 갈래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이끈 공산주의자동맹이었고, 다른 하나는 1만5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슈테판 보른(Stephan Born)의 노동자형제단(Arbeiterverb-ruederrung)이었다. 최초의 노동조합이 출현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러나 1948~49년 혁명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조직적 노동운동은 다시 혹독한 탄압에 직면했다.

2) 노동자정당의 탄생

1948~49년 혁명이 실패한 후 산업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가장 강력한 전제국가였던 프로이센 왕국에서 빌헬름 1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었다. 1863년 페르디난드 라살(Ferdinand Lassalle)은 라이프치히에서 독일노동자총동맹(Der 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ein)을

창립했고,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과 빌헬름 리프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는 1869년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을 결성했다. 이 둘은 1875년 고타회의(Gothar Kongress)에서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으로 통합되었다.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 운동은 1860년대 후반기에 다양한 형태의 직업동맹으로 나타났다.

3) 독일제국의 탄생과 사민당 탄압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이끈 프로이센은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를 굴복시킨 다음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871년 최초의 실질적 통일국가인 독일제국을 건설했다. 제국정부의 강력한 부국강병책에 힘입어 경제호황이 지속되자 노동운동도 다시 활기를 찾았다. 하지만 보수적인 제국정부는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정당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 특히 빌헬름 1세에 대한 두 번째 암살미수 사건은 사회민주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었는데도 비스마르크는 이를 빌미로 1878년 모든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는 한시법인 사회주의자탄압법(Sozialistengesetz)을 제정했고 사회민주주의자를 ‘반국가적 도당’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독일제국의 사회적 계급적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4) 사민당과 노조의 강화

산업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다. 사회주의자탄압법도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막을 수 없었다. 이 법의 시효가 끝난 직후 처리된 1890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독일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쓰기 시작한 사민주의자들은 19.7%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사민당의 득표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1912년에는 34.8%로 원내 제1당이 되었다. 사민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발전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1895년 이후 눈부신 증가세를 보였다.

1891년 에르푸르트(Erfurt) 당 대회에서 채택한 사민당의 ‘에르푸르트 강령’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치, 사회의 급진적 개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강령이 사민당원들을 전일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아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과 카를 카우츠키(Karl Kautsky),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등의 논문과 저서를 둘러싸고 19세기 막바지에는 사민주의의 이론적 기초와 사민당의 정책노선을 둘러싼 심각한 분파투쟁이 벌어졌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광범위한 노동자 문화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노동자 문화단체와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조직이 탄생했다. 여성 사민주의자와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사민당이 새로운 당원을 획득하고 당원들 사이의 우의와 연대를 다지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강력한 조직기반을 만든 독일사민당은 1889년 파리에서 결성된 이른바 제2차 인터내셔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5) 1차 세계대전과 사민/공산주의의 결별

사민당은 경제와 정치의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는 강령을 가진 정당이었지만 노동조합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과의 밀접한 결합은 사민당이 독일에 주된 책임이 있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제국정부의 전쟁공채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여기에 반발한 정파는 스파르타쿠스동맹을 결성했고 1917년에는 독립사회민주당이라는 별도의 정당을 결성했다.

연속된 군사적 패배의 와중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 독일제국이 무너지자 사민당은 정치권력을 떠맡아 혁신적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사민당은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에서 천명한 대로 여성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했고 사용자단체는 마침내 노동조합을 합법적 교섭상대로 인정했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Friedrich Ebert)가 대통령

에 취임했고 폭넓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바이마르 헌법(Weimarer Verfassung)을 제정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정치적 노동운동의 좌파진영은 1918~19년에 걸쳐 새로운 혁명적 정치결사인 독일공산당(KPD)을 결성했고, 공산당은 독립사회민주당의 좌파와 결합함으로써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했으며 곧 소련공산당의 영향력아래 들어갔다. 나머지 사민주의자들은 1922년 모두 하나의 사민주의 정당으로 결속하였다. 사민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의 경계선은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모델에 따른 일당독재를 추구했다.

6) 바이마르와 나치하의 노동자정당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에는 베르사유 평화조약과 제국내의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격렬한 분쟁이 일어났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킨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은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민주당이었다. 1920년 초 사민주의자와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통해 카프-뤼트비츠의 반동 쿠데타를 좌절시켰다. 바이마르 정치체제는 1920년 후반에 가서야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사민당은 노동관계법과 사회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개혁을 성취했으며, 프로이센을 비롯한 여러 곳의 지방정부와 대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강한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이후 정치적 극단주의가 발호했다. 전례가 없이 참혹했던 대량실업에 대한 사회적 불만에 히틀러가 이끄는 극우파가 보수 반동적 정치세력의 후원아래 급속히 성장했다. 정치적 노동운동 진영 내부의 격렬한 분파투쟁이 그 원인은 아니었지만 극우파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1933년 1월 히틀러는 제국총리가 되었다. 나치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에게, 그리고 뒤이어 자유주의자와 시민사회에까지 무자비한 테러를 가했다. 히틀러의 손에 무한권력을 넘겨주는 제국의회의 법

안 표결에서 사민당은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정치적 저항세력이었다.

나치의 권력장악이후 사민주의자는 다른 모든 저항세력과 마찬가지로 체포, 고문, 살해당했다. 사민당 지도부는 일단 체코 프라하에 망명했다가 나중 영국 런던으로 옮겨갔다. 망명지도부는 국내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저항운동을 조직했다. 저항투쟁을 벌인 것은 주로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 좌파였다. 1920년대 이후 히틀러 세력에 강력하게 맞섰던 사민주의자들은 1934년 프라하 선언을 통해 민주적 정치세력을 결속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망명지에서도 공산주의자와 사민주의자의 화해와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민주의자 빌헬름 로이쉬너(Wilhelm Leuschner)와 노동조합 지도자 율리우스 레버(Julius Leber)는 1944년 7월 20일의 실패한 봉기에 참가했다가 살해당했다.

7)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민당의 재건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독일제국은 4개의 연합군 점령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가 이끈 사민당은 공산주의자와의 통합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서부 점령지를 중심으로 중산층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대중정당으로 자신을 재정립했다.

1946년 동독 지역에서는 공산당이 소비에트 군대의 후원아래 사민주의자들을 독일통일노동당(SED)에 강제통합한 다음 일당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5천명이 넘는 사민당원이 체포당했고 수천 명이 도피생활에 들어간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당의 주요직책을 독점하고 노동조합을 당의 지도아래 종속시켰다.

서독지역의 노동조합은 연합군의 감독아래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정치노선을 둘러싼 분열을 극복하고, 1949년 뮌헨에서 단일조직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를 결성했다. DGB는 지향하는 목표에서는 사민당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정당과는 독립된 조직임을 분

명히 했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출범함으로써 독일의 분단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의회의 헌법제정위원회에서 준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민당은 주역으로 참가했으며 연방의회 선거에서 29.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 독일연방공화국의 첫 정권은 근소한 득표차로 승리한 보수 기민련에게 돌아갔으며, 사민당은 ‘건설적 야당’의 역할을 맡았다.

8) 사민당의 대중정당화와 도약

사민당은 전후 20여 년 동안 연방의회에서는 야당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키워 나갔다. 외교정책에서 사민당은 처음에는 아데나워의 일방적 서방지향성을 거부하고 재통일을 우선적으로 중시했다. 그러나 1950년대 말을 전환점으로 유럽 통합 지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방 진영으로의 통합을 수용했다. 동독에서는 1953년 7월 17일 대규모 노동자 봉기가 일어났다. 이 봉기를 유혈진압하고 동독 공산정권을 구한 것은 소련군의 탱크였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은 독일의 분단을 물리적으로 완성했다.

사민당은 길고 격렬한 논쟁 끝에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Godesberger Grundsatzprogramm)’을 채택하여 마침내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변신함으로써 특히 교회관련 조직의 구성원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층을 새로 얻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ts)와 헤르베르트 베너(Herbert Wehner)는 사민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었다. 1966년에는 기민련과의 좌우 대연정, 그리고 1969년에는 자민당과의 중도좌파 소연정을 구성한 것이다.

지방정치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민당은 1966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집권당이 되었고, 1969년에는 사민주의자 구스타프 하이네만(Gustav Heinemann)이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사민당은 대부분의 대도시 기초의회에서

다수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은 정당이 되었다.

9) 사민당의 집권화

1969년 빌리 브란트는 사민주의자로서는 전후 독일의 첫 총리가 되었다. 개혁과 평화, 긴장완화의 시대가 무르익었다. 그는 기존의 서방편입정책을 '새로운 동방정책(neue Ostpolitik)'으로 보완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을 열었다. 그는 소련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조약을 맺고 동독과도 기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많은 후속협약을 통해 새로운 동방정책을 실현했다. 이로써 동서 독일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두 지역사이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그 공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빌리 브란트는 197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70년대말 사민당은 학생운동이 몰고 온 강력한 개혁운동의 일선에 섰고, 빌리 브란트는 1972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는 총리실에 침투한 간첩 검거사건의 책임을 지고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에게 총리직을 넘겨주었다.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는 1970년대에 적군파(Rote Armee Fraktion)등 좌익 테러리즘의 도전과 오일쇼크를 비롯한 경제적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브란트와 슈미트 두 총리는 독일 사회의 현대화를 위해 복지제도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사민당은 또한 군비감축과 평화정책에 관한 논쟁을 주도했다.

1982년 자민당이 사민당과의 연정을 깨뜨림으로써 정권은 기민련-자민당의 중도보수 연합으로 넘어갔다. 야당으로 돌아간 사민당은 고도산업사회의 민주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 강령 개정을 위한 논의절차를 밝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에 응할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또한 절반 이상의 주정부에서 다수당이 됨으로써 지방정부 운영의 책임을 넘겨받았다. 빌리 브란트는 1987년 당총재 자리

를 한스-요혼 포겔(Hans-Jochen Vogel)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치적 의미를 유지했으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브란트의 목소리는 더욱 뚜렷이 들렸다. “이제 한테 속한 것은 함께 자랄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독재가 끝나 두 독립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공산당 독재가 마감되기 전에 마르쿠스 맥켈(Markus Meckel)과 마르틴 굿차이트(Martin Gutzeit)를 비롯한 용감한 민권투사들은 동독사민당을 결성하여 독일 사민당과 자매당임을 선언했다. 법적이 통일이 완성되기 전인 1990년 두 당은 독일사민당으로 통합했다. 45년만의 재결합이었다.

1989년 베를린 연방당대회에서 사민당은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다. 1995년부터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이 이끈 사민당은 환경보호와 세계화의 도전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쟁점을 발전시켜 왔다. 사민당은 1998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를 앞세워 승리를 거두고 녹색당과 신-구 좌파연정을 수립함으로써 16년 동안 지속되어 온 보수-중도 연정시대를 마감하였다.

3. 이탈리아 공산당(PSI)과 노총(CGIL)의 건설²⁾

1) PSI와 CGIL관계의 전통과 노조의 분열

이탈리아 공산당(PCI: 1991년 이후의 좌파민주당 PDS)은 그람시의 전통에서 일찍이 소비에트 공산당과는 전략노선을 달리해 온 이탈리아 공산당(PCI)도 장구한 세월을 거쳐 역시 국민정당화의 길을 걷고 있다. SPD가 처음부터 대중정당노선을 택한 반면 PCI는 반과쇼투쟁이 끝날 때까지 전위정당으로 활동했으나, 의회활동과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전략목표로 하는 그람시 사상 자체에 이

2) 정병기, “노조-정당관계 비교” 연구자료 발췌

미 대중정당화와 국민정당화의 싹은 내포되어 있었으며 PCI 스스로도 당전략 수정의 근거를 항상 그람시이론에서 찾았다. 결국 당전략과 당조직의 발전 그리고 이데올로기성이 강한 이탈리아 국민들의 정서를 바탕으로 PCI는 76년 지역선거에서 34%를 획득하는 등 기민당 다음 가는 큰 정당으로서 노동자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포함하여 언제나 최소한 20%이상의 고정 지지율을 획득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막강한 공산주의 영향력은 오히려 PCI의 집권을 두려워한 미국의 지속적인 이탈리아정치 개입을 불러왔으며, 그것은 전후복구 시절 범연립정부와 70년대 말의 정책연립을 제외하고는 실로 50여년간 기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산주의 세력들의 대공산당 연정을 언제나 가능하게 했다.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이탈리아 정치지형에서 연립의 상대로서 특히 중요했던 사회당과 사민당도 늘 PCI와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자 했고, PCI 또한 이러한 정치지형에 적응하기 위해 그람시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켜 항시 동구 공산주의와의 구별의혹을 없애고자 노력했으며 그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PCI는 전후 역사상 단 한번도 체제외적 투쟁조직이 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정치질서의 수호자 중 하나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탈리아 노조의 역사는 1943년 공산주의 정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민주의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와 카톨릭 정파까지 포함하는 단일 통일노조인 CGIL이 건설됨으로써 시작되었다. 노동자들과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이 이탈리아 노조의 전신으로 출현한 시기가 1840~50년대였으니 공제조합운동을 노동운동에 포함시킬 경우,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역사는 150년이 넘는다. 공제조합이란 바로 이탈리아의 통일에 관한 기본문제에서 묶여져 발전된 조직으로 노동자 정치의식과 정치활동의 발전이라는 현장성과 정파성의 결합된 운동의 형태를 말한다.

1890년대 초부터 철도노조와 금속노조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평의회’는 노조전국연합체의 모태가 됐으며 1895년 사회당의 창당

으로 노동운동의 정치투쟁이 조직화되면서 1906년 사회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탈리아 최초의 노조전국연합체인 노동총연합(CGdL)이 건설되었다. 사회당의 온건개혁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던 CGdL은 이후 혁명적 생디칼리스트들이 분리돼 나가 부정부주의자들과 통합, 이탈리아노동조합연합(USI)을 건설했다. 또한 이탈리아 노조의 한 축인 카톨릭계의 좌파들도 CGdL을 ‘적색노조’로 보고 교육과 협력을 중시하는 이탈리아노동자연합(CIL)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이탈리아의 1차대전 참전을 지지하는 노조원 일부가 USI를 탈퇴한 뒤, 파시스트 노조의 전신이 되는 이탈리아노동연합(UIL)을 건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파노조의 대두도 파시즘 정권기에 들어와서는 다 해체된다. 파시즘시기 노동운동은 CIL과 USI의 해체, CGdL의 자진해산 등 조직노동의 소멸과 함께 지하 반파쇼투쟁, 해외망명투쟁으로 이어진다.

총전이후 파시즘시기의 CGdL의 공산계 지하노동조직인 CGL이 재건되어 주축이 되고, 사회주의계 및 카톨릭 좌파, 사민·공화주의계를 망라한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으로 이탈리아노동총연합(CGIL)이 탄생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자들의 열성적 가입으로 570만이라는 막강한 노조원을 형성한 CGIL의 과제는 독점적 지위를 지닌 기간산업의 국유화등의 정책을 통해 임금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1950년 CGIL에 의한 임금연동제의 도입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이루지 못한 노조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당시 통일노조 CGIL은 반파시스트 투쟁을 비롯한 활발한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PCI와의 연계를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정당간 경쟁과 미국과 국내 반공산주의 세력들의 PCI견제 전략은 노동자계층에 대한 PCI의 독점적 영향력을 묵과하지 않았다. 결국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 미국노총까지 개입한 그들의 통일노조 분리 전략은 주효하여, 상업종사자와 인텔리 그리고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화주의/사민주의 정파가 UIL로 분리해 나가고 사무직과 공공업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정파가 CISL을 건설함으로써 50

년 이후 통일노조 CGIL은 나머지 사회주의 정파와 다수인 공산주의 정파(2/3 이상)들로 구성되는 공산/사회주의 정파노조로서 산업노동자들에 의해 과잉구성된 채 남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CGIL은 이탈리아 노조지형을 주도해 가는 가장 크고 영향력있는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1950년대 후반기에 CGIL은 새로운 전략개발로서 기업내 노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CISL과의 행동통일을 위해서 CISL이 주장해 온 기업별 단협을 거부했던 당시의 태도를 수정하고 전국적 차원의 협략과 기업별 단협을 병행했다. 이러한 전략의 성과물은 1958~59년의 단협체결운동을 통해 가시화됐다. 정파노조화한 CGIL의 PCI에 대한 관계는 정당간 경쟁의 심화라는 이탈리아 정치지형과 다른 노조들과의 통합운동의 진행상황에 따라 때로는 중속이 심화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자율성을 증대해가는 과정을 밟아 왔다. PCI의 조직발전과 전략수정이 그러했듯이 PCI-CGIL 관계에서도 지도와 자율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두 조직의 주장도 항상 그람시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그람시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관계에 입각하여 정치투쟁 조직인 정당에게 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자조직들을 사상적, 조직적으로 지도하는 “조직된 전위”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한편, 노조에게도 반자본주의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권력장악 투쟁을 인정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PCI의 지속적인 지도권 주장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노조의 정치적 역할과 자율성 증대의 이론적 바탕이 되어왔던 것이다.

2) PCI와 CGIL의 분립화과정

CGIL의 자율성 증대는 CGIL 자신의 정책상의 필요성이 PCI의 전략수정의 작용과 일치한 결과였다. CGIL은 50년대 초반 PCI의 지도노선에 따른 지나친 정치투쟁 위주의 노조활동에 대한 내부 비판으로 인해 공장내 문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하고, 사회당의 PCI결별 선언을 계기로 조직내 공산주의정파와 사

회주의정파간 갈등의 소지를 방지해야 할 절박한 동기가 대두되자, PCI와 일정한 거리를 가질 필요가 생겨났다. 그에 따라 CGIL 서기장은 56년 PCI 당 대회에 참가하여 노조의 독립을 요구하였고 PCI는 당 전략 수정에 입각하여 이를 승인하게 되었다. 당시 PCI는 1944년 톨리아티(Palmiro Togliatti)에 의한 대중정당화 선언이후 56년에 보다 유연성있는 의회주의 노선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적 사회주의로의 길”을 천명했는데, 이는 노조와의 관계에서 다른 두 노조에 대한 당의 개방과 CGIL의 정책변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독일의 1906년 만하임 협정에 견주는 것으로 꼬박 50년 뒤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CGIL의 조직내적 문제와 공장내 문제로 정책변경상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이러한 자율성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했고, 실질적 자율성은 세 노조간 공동투쟁의 경험과 69년 “뜨거운 가을(autunno caldo)”로 불리는 자발적 파업으로 촉발되는 조직발전과 통합운동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정치적 역할의 강화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69년의 파업은 정파로 분리된 노조조직을 뒤로 하고 밑으로부터 조직된 노동자들의 자발적 공동투쟁조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투쟁목표는 단순한 경제적 목표를 벗어나 이탈리아 사회에 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자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조직과 요구수준의 발전을 노조는 진지하게 받아들여(반면 독일의 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자의 자발적 파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73~74년 독일의 자발적 파업은 단지 노조내 좌파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제한된 정도로만 노조정책 변화에 반영되었을 뿐이었다), 자발적 투쟁조직을 장차 통일 노조의 기본단위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구조 개혁”을 주요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탈리아 노조를 정당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당대체세력(Parteienersatz)” 또는 “대체정당(Ersatzpartei)” (Otto Jacobi, 1988)라고 칭하게 되었다. 실제 이탈리아 노조는 많은 경우 파업을 통해 정부교체에 핵심적 역할을 해냈던 것이다.

결국 노조의 주요한 사회개혁세력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강화시킨 이러한 발전과정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세 노조가 통합해야 한다는 일반적 의식을 결과했고 그 통합의 주요 방해요소가 되어 온 각 노조의 정당중속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세 노조간 의견일치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가장 큰 노조로서 통합운동을 주도하는 CGIL은 69년에 이르러 PCI를 비롯한 일체의 정당과도 노조간부의 당직이나 의원직 겸임을 금지하는 규율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합이 될 경우 통일노조내 PCI의 입지가 강화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상실할 것을 염려한 기민당과 공화당, 사회당, 사민당 등의 공작으로 통합은 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노조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통합운동은 결코 무위로 끝나지는 않았으며 노조의 자율성 증대와 사회적 역할 강화는 이후 정당과 노조간 갈등의 씨앗을 잉태했다. 즉, 통일노조를 목표로 한 조직적 통합에는 실패했으나 72년 마지막 통합회의의 결과 공동투쟁의 상설 협의회를 성립시켰고 이 협의회는 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이탈리아 노조들이 중도정부와 우파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조직적 밑거름이 되었다.

3) 정권참여와 노동계의 양보노선

PCI도 이와 같은 노조의 구조개혁 노선을 수용하여 당의 정책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화된 노조의 사회개혁세력으로서의 역할에 위협을 느껴 노조에 대한 주도권 주장의 소리를 높이고 구조개혁이 정당의 고유 역할임을 강조하며 노조에게는 노조 고유영역에서 자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통합운동의 실패 이후 강화된 정당의 영향력과 7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노조의 양보를 결과하고, PCI는 당시의 경제위기와 파시스트의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여 적어도 가시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전략수정, 즉 70년대에 중산층과 중도세력과의 동맹을 목표로 하는 “역사적 타협(compromesso storico)” 전략을 통해 77~79년간 의회 다수 참가의 형태로 정권에 참여(Governo delle Attensioni)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이것은 PCI가 의회내 정부불신임 투표를 포기하는 대가로 기민당 정부의 긴축정책에 PCI의 사회개혁 정책을 수용한다는 정책연합의 형태였다.

이에 대해 양보노선으로 선회한 노조들은 CGIL이 제안한 EUR노선(로마의 회담장소의 이름을 따서 명명)으로 일컬어지는 전략을 통해 정부의 긴축정책을 수용하고 임금인상투쟁을 자제하는 대신 PCI와 개혁세력의 개혁정책을 기대하고 지원했다. 이탈리아 노조들은 EUR노선에 의한 양보와 지원을 통해 정부의 개혁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노사간 힘의 균형상태에서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광장(Diskussionsforum: Fritz W. Scharpf, 1987)”이었다면, 이탈리아 노조들의 EUR노선은 자본측과의 갈등의 소산도 정부나 PCI에 의한 지도의 결과도 아닌 노조들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 결정이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자본세력과 정부의 집행능력은 3자간 대화체를 형성하고 이끌어갈 만큼 충분히 크지 못했던 것이다.

4) 최근 PSI와 노동계의 정치적 역할

PCI의 구조개혁 정책은 그러나 기민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집행과정에서 자연 희석될 수밖에 없었고 노조의 정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PCI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충분치 못했다. 게다가 사회당의 득표제고와 PCI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 그리고 기민당내 우파와 더 이상의 PCI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한 미국의 공작으로, 당시 PCI를 포함한 실질적 연정의 구성을 주도하던 기민당내 좌파의 영수 Aldo Moro가 납치 살해당함으로써(Gianni Cipriani,

1993) 이후 PCI와의 어떠한 연정의 형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CGIL과 PCI의 관계에서도 차분히 진행되어 오던 노조의 자율화 과정을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2년의 정권참여기간 동안 PCI는 지속적인 노조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했고, 정치적 호기의 상황에서 CGIL은 모든 역량을 PCI를 통한 정치적 목표의 달성에 집중하였으며 다른 두 노조의 동의와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었다. 그러나 다시금 정당간 경쟁 특히 사회당의 탈선은 노조간 분열을 가져왔고, 80년에 들어서는 정치투쟁 노선에 대한 조직내 비판이 제기되고 Fiat사의 경우처럼 대규모의 반노조 시위까지 일어났다.

또한 80년대에는 성장한 자본측과 중도정부가 물가연동제(*scala mobile*)의 일방적 감축 등, 노조세력에 대한 공세를 매우 강화하였다. 물론 80년대의 정부도 크락시 정부등 많은 경우 사회당을 포함한 연정이었지만, 60년대 초와 달리 사회당은 70년대를 거치면서 좌파의 색깔을 버리고 중도화 되었기 때문에(M. Donovan, 1989) 80년대 이후의 기민당/사회당 연정은 중도정부라고 해야 옳다.

결국 8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점차 수세기에 빠져들어 갔으며 중후반기에는 과거의 역량을 모두 소진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탈리아 노조들은 85년 재개되어 90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공동투쟁과 통합운동을 통해 다시금 중요한 사회개혁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90년대의 통합운동은 특히 CGIL의 PCI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PCI 자체의 변화와도 관련된다.

80년대에 PCI는 동구변화의 외풍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 강제로 인해 노조에 대해 지도권을 주장할 여념이 없었다. 86년 17차 당 대회에서 PCI는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여전히 최종 목표로 확인했으나, “과거로부터의 환상적인 단절”이 아니라 “여러 경제형태들의 복합”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당의 본질적 변화는 예고된 것이었다. 89년 18차 당 대회에서는 “민주주의”와 “강력한 개

혁주의(reformismo forte)”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당명개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91년에는 “커다란 현대적 개혁정당”으로 자기위상을 정리하고 “좌파들의 민주적 정당(PDS: Partito Democratico della Sinistra)”이라는 색채 없는 당명을 채택했다. 당명개정으로 대표되는 PCI의 변화를 독일사민주의 일부가 보는 바와 같이 사민주의화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Helga Grebing(1992)의 조심스러운 지적처럼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른 “좌파들의 liberal한 정당”, 즉 탈공산화 과정의 일부라고 보인다. 그러나 PDS가 당명에서 공산주의라는 수식어를 떼기는 했으나 과연 계급정당이기를 그만두고 국민정당화 했는가는 그들의 선언과는 무관하게 조직원 구성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당원구성이 여전히 60%를 상회하는 산업노동자와 하층 서비스업 노동자의 비율을 보이는 PDS를 국민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그들이 점차 당을 개방하고 국민정당화해 갈 것이라는 점은 과거의 행적을 볼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개명과 함께 PCI는 CGIL에 대한 전통적 지도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으며, CGIL도 그에 따라 같은 해 조직내 정파를 해소하고 장차 어떠한 정당과도 대화할 것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겼다. 이것이 또한 세 노조간 통합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며, 통합의 필요성은 노조의 조직원 구성면에서도 제기되었다. PCI처럼 CGIL도 산업노동자조직이라는 전통적인 조직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CISL이 사무직과 공공업무분야를, 그리고 UIL이 상업과 기술직 및 인텔리층을 과잉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적 결함은 노조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과 조직적 힘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간 통합을 더욱 강조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통합운동의 가속화는 94년 베를루스꼬니(Silvio Berlusconi)의 정치 그룹과 파시스트 연정에 의한 사회보장정책 축소기도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장차 이탈리아의 노조지형은 통합의 성공 여부에 따라 새로운 분

석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통합은 정당간 경쟁의 도가니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중요한 사회개혁세력으로의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스웨덴 노동자정당의 건설³⁾

1) 사민당의 노선변화

스웨덴 사민주의는 1911년의 제8차 사민당 전당대회를 분기점으로 하여 ‘개혁주의(reformism)’로 그 운동 방향을 틀었다. 개혁주의로의 선회는 1890년대 초에 사민주의자들이 ‘발전(utveckling)’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갈등이 심화될 정도로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한 다음에야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테제를 신봉했다.

1891년 제2차 사민당(SAP: 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 Schwedens)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사민주의자들은 이 테제를 스웨덴에 적용시켜,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은 미래의 과업에 속하나 그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따라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에 맞추어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민중의 현재적 관심’을 접목하는 데까지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제2차 사민당 전당대회는 자본주의는 ‘발전의 정도’에 따라 사회주의로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당은 ‘노동계급의 현재적 관심을 고려하는 민중의 당’이 되어야 한다는 브란팅(Hjalmar Branting)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이후 사민주의자들의 논쟁에서 ‘발전’이라는 용어는 현재에는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상징적 함의를 담고 있었다. ‘발전’의

3) 안재홍,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쇠퇴 발표문중 일부인용

담론에 대한 반박은 곧 사민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1908년에 실제 이러한 이유로 사민당은 두 명의 무정부주의의 지도자를 당원 투표를 통하여 제명시킨 바 있다.

1910년대를 전후하여, 그 동안 막연히 언급되어 왔던 ‘관심’의 주체가 집단이 아니라 개인들의 관심임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주의는 더욱 체계화되었다. 사회주의의 이념과 미래사회에 대한 이상이 민중의 관심과 일치될 때, 민중은 자발적으로 사민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지향점을 “개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로 구체화시켰다. 1911년 제8차 사민당 전당대회는 휴머니즘이 사민당의 목표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포럼이었다. 또한 개인주의가 곧 자유주의라는 터부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지향한다면 자유주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개혁주의에서 일단 미래의 사건으로 접어 둔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문제가 1910년대에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겪는 가운데 현실로 성큼 다가섰으며,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논쟁에서도 ‘발전’의 담론에 근거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갔다. 무엇보다도,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였으며, 곧 이어 사회주의의 성격과 전제조건에 대해 열띤 논쟁에 돌입했다. 러시아혁명이 발생한 1917년 겨울부터 의회가 보통선거권제를 통과시킨 1919년 겨울까지, 노동쟁의를 위시한 대규모의 사회적 소요는 혁명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격렬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비민주적 방법에 의한 불세비키식 사회주의 혁명을 단호히 배격했다. 그 대신 정치적 민주화가 사회주의 혁명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소요를 보통선거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이미 1910년

대 이전에 스웨덴 개혁주의가 개인들의 현재적 관심의 실현을 통해서,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의 정도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할 것을 천명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1920년대부터 사민주의 담론의 초점이 점차 미래 지향, 즉 사회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발전’에서 현실에서 경제적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성장’으로 옮겨졌다. 사민주의자들은 ‘발전’의 개념에 근거하여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논의했으나, 예컨대, 필러는 그 이행 조건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생산성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민중의 생활조건 향상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또한 비그휘르스(Ernst Wigforss), 필러, 칼레비(Nils Karleby) 등은 발전의 단계에 따르는 적절한 생산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참여를 주장했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1920년의 경제공황 이후 구조화된 실업,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는 1920년대 중반부터 ‘성장’을 통한 실업의 감소 및 임금조건의 개선이 계급타협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1930~40년대에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으로 운동의 방향키를 고정했으며, “국유화 대신 국가의 조정과 정책으로 자본의 사용을 통제”하는 정치경제체제, 즉 ‘국가관리경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스웨덴의 개혁주의는 1920년대 후반부터 ‘인민 가정’(folkhem)을 담론화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지향했다. 1928년 국회에서 한손(Per Albin Hansson)은 “사회, 즉 국가와 지방공동체”는 “인민 가정”(folkhem)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정은 구성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 연대, 협력 그리고 우애”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회도 이처럼 “공동체와 연대”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제적 합의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1930년대에 들어 사민주의자들은 대체로 한손의 주장에 공감하였다. 1930년대에 사회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필러는 ‘인민 가정’ 담론을 보다 구체화시켜 사회복지정책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이를 정책으로 옮

기는 개혁을 추진했다. 인민 보험, 복지정책의 보편적 적용, 복지국가 운영의 지방분권화 등이 그 예이다. ‘인민의 가정’-스웨덴에서는 ‘folkhem’을 복지국가로 해석하기도 함-의 담론화는 사회평등의 신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의 갈등 세력들, 즉 노동과 자본이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 아래서 공존, 더 나아가서는 협력도 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2) 사민당과 노동진영의 협력관계

초기 노동운동은 조합원들의 현실적 관심인 경제이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이념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사민당이 연계됨으로써 성장했다. 따라서 양 조직은 협력과 동시에 대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두 조직은 자본에 대항한다는 점에서는 이해를 공유했지만, 그 지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스웨덴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동원에서 양 축을 이룬 사민당과 노동조합 운동이 독특한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성장했으며, 개혁주의 담론은 바로 이를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노동운동 초기에는 SAP가 노동조합운동을 이끌었다. 1889년에 창당된 사민당은 1899년에 LO(Landesorganisationen i Sverige)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노동조합운동의 ‘비공식 사령부’로 회자될 정도로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당·노 관계의 구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은 자본과의 대립을 의미하는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운동을 개념상 분리했기 때문에 1889년에 사민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노동조합운동에 사회주의 이념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투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정치적·사회적 깨우침”을 경험하는 “사회주의를 위한 학교”라는 논리로 노동조합운동을 정당화했다. 더 나아가 1897년에 사민당은 노동조합운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으며,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들의 ‘현재적 관심’인 생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도 정통성을 부여했다. 브란팅은

이것이 스웨덴 사민주의가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사민주의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8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노동조합운동이 재정적,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자, 당·노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금속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노조연맹들은 사민당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경제투쟁에 전념하고자 했다. 사민당도 노동쟁의의 지원이 가져오는 효과에 회의를 던지기 시작했다. 당·노간의 갈등은 LO의 창설(1899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민당이 LO회원 단위노동조합들이 2년 안에 의무적으로 당에 가입할 것을 노동조합운동에 요구함으로써 표면화되었으며, 이 문제는 근 2년여를 끌었다. 1900년에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함으로써 난제를 풀어 나갔다. 즉 사민당은 LO와 노동조합연맹이 당으로부터 조직적, 기능적 독자성을 누리는 것을 인정하되, 하부 단위조직의 수준에서는 당과 노동조합간 연계를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부조직에서 당·노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사민당의 전략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1902년까지의 집단가입의 경우의 예를 보면, 대부분의 단위노동조합은 사민당의 하부 단위조직인 노동자코문을 통해서 사민당에 집단으로 가입했다. 하부조직에서 당·노 관계는 노동계급 형성의 근간을 이루었다. 하부조직에서는 당과 노동조합은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결합되었다. 특히, 노동자코문이 운영하는 ‘민중의 집’(folkets hus)은 노동조합원들에게 정치의 공간이자, 영화관, 도서관, 문학 강좌 등이 개설되는 문화의 공간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관심을 표출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근대의 지식 세계에 접근함으로써 관심의 지향을 공동체로 돌릴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보했던 것이다. 1890년에 2곳에서 시작된 ‘민중의 집’은 20세기 들어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00년에는 22개, 1905년에는 53개, 그리고 1910년에는 112개로 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노동운동의 동원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

다.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사민당과 노동조합원의 경제적 관심을 대변하는 LO는 기능적으로 독립되었다. 그러나 노동계급 일상에서는 사민당과 노동조합은 결합되어 관심과 이념을 모두 포용하는 사회운동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당·노 관계의 형성은 스웨덴 노동운동이 격렬한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민주의자들의 이념 논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당·노 관계의 형성과 함께 스웨덴 사민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민중의 현재적 관심인 생활조건의 향상과 미래 지향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모두 지향하는 개혁주의로 도약한 것이다.

1930년대 중반까지 LO는 계급화된 정치조직이 아닌,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1909년 총파업 실패의 영향으로 LO는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과 단위조합을 잃는 타격을 입었다. LO는 1917년에 이르러서야 1907년 수준의 조합원을 확보했으며, 스웨덴은 다시 노조 조직물에서 유럽의 선두에 섰다. 혁명전야를 방불하게 하는 1917~19년의 상황에서도 LO는 볼셰비키혁명을 단호히 거부했다. 1921년 경제공황 이후부터 스웨덴사용자단체(SAF)는 임금인하를 위해 광범위한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는 등 공격적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노조연맹들은 LO 총회-1917년, 1922년, 1926년, 1931년-에서 파업의 결정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LO로 중앙집중화함으로써 SAF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LO의 지도부는 노동조합운동 전체를 대표하여 자본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즉 계급화된 정치조직으로 LO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유보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LO는 임금의 문제는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시장 악화로 발생하며, 노조의 힘이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이상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1936년 LO 총회에서 LO 지도부는 중앙집중화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익단체의 역할을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LO가 중앙집중화를 선택한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을 집중화하여 더욱 공격적인 투쟁을 벌이자는 산하 노조연맹들의 요구에 응했기 때문이 아니

었다. LO는 1926년 총회 이후 꾸준히 거론되어 오던 연대임금제를 실천하여 노동계급 전체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LO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조직된 15인 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중앙집중화를 연대임금제와 연계시켰다. 1941년 LO 총회는 일부 노조연맹의 반대로 연대임금제를 개정된 규칙에 삽입시킬 수는 없었으나, 대체로 15인 위원회 안을 통과시켰다. 조직 내부의 중앙집중화 작업과 함께 LO는 사회와 경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예컨대, LO는 임금은 분배의 문제라기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경제 전체의 역량이 강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LO의 변화된 인식은 LO의 15인 위원회의 위원인 카스파르손(Ragnar Casparsson)이 1941년 LO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묘사된 바 있다: “국가, 이는 곧 우리”이며, “국가가 반동정신으로 작동하는가 아니면 자유정신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은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사민당과 LO의 향후 진로

근대로의 이행기에 스웨덴 노동운동은 개혁주의와 국가 개입을 배제시킨 자율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켰다. ‘발전’, ‘성장’, 그리고 ‘인민의 집’의 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사민당의 개혁주의를 관통하는 정신은 미래의 이상사회와 현재 실천 가능한 사회를 구분하되, 미래의 이념과 현재의 관심을 끊임없이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사민당은 노동조합운동에 정통성을 부여하였고 동시에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했다. 1920년 이후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으로 빚어진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LO는 SAF와 성장을 전제로 한 타협을 선택했다. 사민당이 집권한 상황임에도 LO는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 배제와 노동의 사용과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을 요구한 SAF와 손을 잡음으로써 살트웨바덴에서 역사적 대타협을 이

끌어 내었다.

요컨대, 스웨덴 노동운동은 근대로의 이행에서 발생한 위기를 국가가 아닌 자본과 공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돌파하려 했던 것이다. 개혁주의 담론은 노동과 자본간의 이와 같은 타협을 용인할 수 있는 이념적 공간을 열어 두는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내부적으로 정통성의 위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스웨덴모델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

근대의 과대 성장기에 스웨덴의 노동운동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하나의 틀에 엮으려 했다. LO가 주도한 렌모델은 자본의 집중과 산업합리화를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화 연계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와 복지국가간의 유기적 결합을 시도했다. 이와 같은 결합은 ‘도덕적 경제’(moral economy)에 기초한다. 노동운동이 연대 임금제와 산업구조 재편에 따르는 단기적 실업을 자발적으로 용인했기 때문에 스웨덴모델은 가능했다.

이는 근대로의 이행기에 노동운동에서 현재의 관심과 미래 지향의 사회주의 이념이 융해되어 노동계급이라는 정치·사회적 공동체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실천에 옮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경제가 기초하는 공동체주의는 근대 부문이 과대 성장됨으로써 그 제도적 제약이 약화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과 복지국가의 행정영역, 즉 코포라티즘의 네트워크가 과대하게 팽창됨으로써 노동운동은 공공의 이념과 관심을 응축시키는 사회 중심적 운동에서 이익 갈등의 정치에 휘말려 들었기 때문이다. 임금유동을 중심으로 한 노노 - 화이트칼라 노조 대 블루칼라 노조, 그리고 사기업 노조 대 공공부문 노조 - 간의 갈등, 그리고 임금유동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노조연맹의 ‘초계급연합’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LO는 스웨덴모델의 문제점들, 즉 노동운동 내부의 민주화, 소유의 집중, 임금유동을 둘러싼 노노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화·계급화의 노선을 선택했다. LO는 한편으론 입법화의 방법으로 직업의 안정, 단위 노조의 권한 강화,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공유를 쟁취

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차별이 없는 연대임금제를 실천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계급화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LO의 이와 같은 노선은 노사관계의 탈정치화에 기초한 살트셰바덴 협약의 틀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살트셰바덴 협약에 내재되어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LO는 스스로를 이익단체로 규정함으로써 SAF를 협약에 끌어들이 수 있었지만, 이의 수행은 정치화·계급화된 조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LO는 근대의 과대 성장으로 이미 사회계급의 분화가 심화되고, 이익이 사회 갈등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는 상황에서 계급화를 시도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계급 내부의 평등화를 위한 LO의 노력은 역으로 계급 내부 간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대세를 역류시키려 한 만큼 대세의 강도는 더 강해졌던 것이다.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199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는 코포라티즘이 급속히 와해되고 있으며 임금협상제는 분권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각 국가를 공통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변수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특수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스웨덴이 현재에 겪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1930년대 이후 제도화된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LO는 정치화·계급화 되었고, SAF는 이에 대응하여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버리고 정치 세력화의 길로 나섰다. 계급 분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LO가 취한 계급화 전략은 오히려 내부의 역량을 약화시킨 반면, SAF는 풍부한 조직과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 세계화의 추세에 편승했기 때문에 계급화에 성공하고 있다. SAF는 여론형성과 로비라는 정치적 수단을 구사하여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임금협상의 분권화와 탈코포라티즘을 가속하여 LO의 정치적 기반 자체를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SAF가 LO의 정치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원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스웨덴모델의 성공에 있다. 고용과 복지라는 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노동운동이 치른 대가는 연대임금제와 생산합리화이었고, 그 결과 소유 및

기업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노동운동이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했을 때 스웨덴 기업들은 이미 거대화되었고 세계화의 행로로 방향을 틀어 자본과 함께 가볍게 날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요컨대 스웨덴의 정치경제체제는 이제 스웨덴모델로의 회귀보다는 새로운 모델을 지향해야 하는 분기점을 넘어선 것이며, 자본의 거대성장속에 시민당과 LO의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한국의 노동자정당의 건설과정

1) 진보정당운동의 발단

해방이후 제16대 총선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치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건국 초기 노동운동이나 좌파의 정당건설 노력은 분단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분산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실패하였다. 제16대 총선에서도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민주노동당이 이름 그대로 노동자정당으로서 처음으로 총선에 참여하였다. 민노당 지지는 불과 1.17%로서 15대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얻었던 1.2%에도 못미쳤다.⁴⁾ 노동조합원에 가입한 근로자를 약 10%임을 고려할 때 턱없이 낮은 지지율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노동자정당의 현주소이다.

한국의 노동자는 기업별 수준인 작업장에서의 조직화에는 부분적으로 성공하였지만,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노동시장의 전국화는 아직도 멀며 정치적 조직화에는 완전 실패하였다. 물론 정치 환경과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라 16대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의 3.9% (95만7천여표) 득표율은 어느정도 노동자정당의 뿌리내리기의 단초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진보정당의 시초는 한국전쟁이후 50~60년대를 거치면서

4) 민노당과 청년진보당의 지지를 합해도 1.82%밖에 안된다.

나타난 1956년 진보당, 1957년 민주혁신당, 1960년 4·19이후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통일사회당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은 한국전쟁 이후 새롭게 형성된 한국사회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이미 정치적, 사상적으로 단절된 40년대 좌익의 잔존세력과 그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2) 한국전쟁이후 제3공화국 이전의 진보정당

진보당은 1956년 1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대통령후보가 210만여 표를 얻는 성공을 거둔 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11월 창당되었다. 진보당은 중도좌익과 한민당계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일부 우익 등 복잡한 인적 구성으로 출발하였으며 평화통일을 내세운 통일정책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보수정당과 정책상 별 차이를 갖지 않았다. 주로 조봉암 개인의 정치력에 바탕한 상층연합의 성격이 강했던 진보당은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성과를 대중적 기반의 확대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1958년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와해되었다.

1960년 4·19이후에는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통일사회당 등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나타났으나 급진적인 통일정책외에는 별다른 실천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인물중심의 상층 정치활동과 고질적인 분파대립으로 일관하다가 7·29선거에서 참패하고 결국 5·16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3) 제3공화국하의 진보정당

4·19혁명의 실패로 나타난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에는 1967년 통일사회당, 1981년 민주사회당, 1982년 신정사회당, 1985년 사회민주당 등이 혁신정당이라는 명분으로 건설되었으나 이들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맥을 잇지 않은 군사정권의 필요에 의한 성격이 짙은 정당들이었다.

한국분단의 고착화와 군사정권의 태동은 이념과 조직 양면에서 일체의 진보적 정치활동의 유산과 전통의 맥을 단절시켰다. 그러나 30년이 넘게 계속된 독재정권 아래에서 진보정당운동이 암흑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한국 자본주의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진보정당운동이 태동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형을 형성시켜 왔다.

4) 1987년 이후의 진보정당건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국내외 정치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권을 장악하였던 군부독재세력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진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운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동북아를 둘러싼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로서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며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해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1988년 3월 민중의 당, 한겨레민주당이 창당되었지만 그 해의 총선에서 실패하였으며, 양당은 9월에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을 목표로 1990년 4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과 함께 민주연합추진위원회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창당방향에 대하여 보수야당과의 통합파와 독자정당파로 대립함으로써 통합파를 제외하고 1990년 11월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민중당이 1991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즈음에 1992년 1월에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대중정당건설을 목표로 별도의 정당을 만들었으나 1992년 총선을 앞두고 민중당과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92년 3월 선거에서 한석의 의석도 내지 못한 채 법적으로 해산당한 후 1996년까지 진보정당은 재건되지 못하였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국민승리 21은 권영길후보를 출마시키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대중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노동단체로서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이후 2000

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2%의 득표율로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으나,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48.9%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정당 투표에서 8.1%(1,339,728표)를 득표함으로써 자민련을 제치고 제3당의 자리를 확보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며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3.9%의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진보정당으로서의 토대를 쌓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2년 대선을 앞둔 11월 3일 한국노총이 노동자, 농민, 서민층을 포괄하는 개혁적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사회당을 창당하면서 대선후보를 출마시키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가장 커다란 노동단체에서 또 다른 진보정당을 출범시킴으로써 2004년 제17대 총선은 전체 노동자대중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의 약진을 가능할 정치환경에 처해있다.

제 3 장 독일 노동자정당의 목표와 정책

1. 시민당의 이념적 배경

비스마르크 시대에 출범한 시민당은 투표권을 갖지 못한 노동계급을 상대로 투표권 획득운동을 전개하였다. 1863년 라살레가 주도한 사회당은 정강정책의 유일한 목적으로서 ‘평등, 보편적 및 직접 투표권을 위한 평화적이고 합법적 투쟁’을 내걸었다. 1875년 고타 강령의 기초는 보편선거권 획득이었다. 초기 노동자정당이 전개한 선거권 투쟁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을 조직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냉전 시대에 들어서서 극우파가 집권한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공산주의와 구분하지 않고 위험한 사상으로 몰아 박해하였다.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달리 사회정의, 사회적 연대와 더불어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 민주주의 본고장 서유럽의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에서 시민당/사회당/노동당 등의 이름을 가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단독 또는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는 유토피아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 숨쉬는 자연을,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진보를 추구할 용기를 북돋우고자 한다. 이러한 시민당의 정신은 1989년 베를린 연방 당 대회에서 의결된 기본강령에 압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베를린 강령'을 일부 수정 보완한 1998년 라이프치히판이다.

2. 사민당의 목표

독일사민당의 기본강령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는 기본강령 전체를 규정하는 사민주의자의 가치관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한다. 제2장 '사민주의 정책의 기초'는 인간, 인권, 정치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철학을 집약해서 보여준다. 제3장 '공동의 안전과 평화'는 유럽과 국제사회의 평화질서를 위해 독일이 취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독일 사민주의자의 평화주의적 세계관을 밝혀 놓았다.

강령의 몸통 격인 제4장은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항은 남녀와 세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지향하는 사민주의자의 기본 자세를 담고 있다. 2항은 완전고용과 노동자의 문화 생활,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기본 정책과 더불어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에 관한 정책을 밝히고 있다. 3항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개혁과 사회정책적 과제를 다루었다. 4항은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환경친화적 개조와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민당의 정책을 집약한 것이다. 그리고 5항은 의회와 노동조합, 교회, 행정조직 등 국가조직과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려는 사민당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은 이 강령이 폐쇄적이고 완결된 도그마가 아님을 밝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사민당의 열린 자세를 강조한다.

독일사민당의 기본강령은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점과 아울러 사회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사이의 친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강령의 원래 목차를 따르지 않고 그 핵심 내용을 여덟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한다.

1) 공동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국제 사회

세계평화를 지키고, 경제 권력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천연자원

과 기술과 지식을 정의롭게 나누고, 삶의 토대인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질서가 필요하다. 유엔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유엔은 비폭력적 국제정치의 틀이 되어야 한다. 시민당은 유엔을 정치적, 재정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동서간의 대립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줄어들수록 유엔은 더 효과적으로 평화를 중재하고, 인류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으며, 가난한 나라들의 이익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 국가들이 더 큰 권한과 과제를 부여할수록 유엔은 이러한 과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시민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 강화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그리고 유엔 산하 국제군비통제위원회의 설치를 옹호한다. 유엔과 산하기구의 구조와 권한을 재정립해야 한다. 민주적 국제사회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정책

인류는 함께 살아남거나 함께 멸망할 것이다. 시민주의자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 특히 평화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한다. 전쟁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는 폭력과 착취와 억압이 없이 모든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 정책은 경제, 환경, 문화, 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협동을 포함한다.

평화정책의 과제는 권력투쟁을 완화하고 이해대립을 절충하며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적 협력을 통해 세계 지배를 추구하는 경향을 견제하며 체제, 이데올로기, 종교와 관련된 적대관계를 평화적 경쟁관계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시민주의자는 군대와 관료집단과 군수산업의 연계를 깨뜨려 군수산업을 민수(民需)산업으로 전환

시키려 한다.

3)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사회

사민주의자는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에 참여하며 만인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사회정의에 대한 지향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동등한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동등한 정치적 사회적 기회의 보장,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평등을 요구한다.

사회정의는 소득과 재산과 권력의 분배에서 더 많은 평등과 아울러 교육과 문화의 세례를 받을 기회의 평등을 포함한다. 평등한 삶의 기회는 획일성이 아니라 만인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여건을 의미한다. 국가는 사회정의와 동등한 삶의 기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환경과 인간을 위한 경제

사민주의자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핵시대의 무거운 짐을 벗어내는 생태적 사회적으로 혁신된 경제를 원한다. 환경 위기는 범지구적 문제이다. 독일 국민은 독일의 몫을 수행함으로써 범지구적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헌법은 삶의 자연적 기초인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국가의 과제로 명시해야 한다. 대기의 파괴와 해양 오염, 기후 변화와 숲의 사멸, 지표수 오염과 공해병, 동식물의 연이은 멸종은 자연적 존재조건의 총체적 파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산업사회의 환경친화적 개혁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었다.

사민주의자는 산업선진국들이 범지구적 환경 파괴의 주된 책임을 지고 환경보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 산업선진국들은 우선 스스로 사회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에너지와 천연자원과 토지에 대한 착취를 종식시켜야 한다. 나아가 제3세계 국민들이

그곳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노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결정적인 조건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욕구를 창출한다.

노동의 기쁨과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재료와 도구와 기계를 다루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조직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분업과 협동을 통해서 사람은 인격과 개성을 형성하고 발전한다. 노동의 고통은 과도한 요구와 부족한 관심, 건강을 위협하는 비인간적 노동, 억압과 소외에서 나온다. 직업노동은 자존심과 사회적 인정,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참여의 가능성을 열고, 물질적 독립성을 제공한다.

사민주의자는 직업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공공봉사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똑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사민당은 만민에게 안정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인간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지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사민주의자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직업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이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을 장려한다.

6) 남녀와 노소, 독일인과 외국인의 평등과 연대

사민주의자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며 평등과 연대에 기초를 둔 사회를 지향한다. 남자와 여자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가사노동과 직업노동뿐만 아니라 교육과 예술, 스포츠와 사회 봉사에 참여할 여력을 가지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다.

노년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삶의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

회에서는 세대간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급속한 문화적 기술적 변화는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사민당은 적극적인 문화정책과 교육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을 통해 세대간의 긴장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상이한 세대 사이에 필요한 것은 물이해와 경쟁심이 아니라 경험의 교류와 연대감이다.

인간은 사랑과 편안함과 다사로움을 찾아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만든다. 헌법은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감으로 맺어지는 가족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는 모든 형태의 생활공동체가 똑같은 보호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동성간의 생활공동체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민주의자의 신념이다.

사민당은 또한 인종과 종교, 문화의 차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고향과 민족, 언어와 문화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사민당은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독일인과 외국인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추진한다.

7) 개인의 자유와 의회민주주의

사민주의자는 누구나 자기의 개성을 자유롭게 펼치고 책임성 있게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위해 싸운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삶의 양식이다. 자유로운 인간만이 존엄성과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며 자유를 누릴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 누구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봉쇄당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시민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에 기초를 둔다. 국가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비효율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관료주의를 부른다. 사민당은 사회의 '국가화'(Verstaatlichung)에 단호히

반대한다.

사민주의자는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 그러나 다수파는 참을성 있게 야당은 물론 의회 밖의 비판세력과 대화해야 한다. 다수파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결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헌법적 가치와 미래 세대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일수록 더욱 그렇다. 의회민주주의는 또한 시민 개개인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으며 시민의 견해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의회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의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과 아울러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민주의자는 자기가 반대하는 법률에도 복종할 것을 약속하며, 그 법률을 바꾸는 데 필요한 의회의 다수파 지위를 얻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여기서도 '비례균형의 원칙'이 적용된다. 더 높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위법을 어길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법률 위반이 범죄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민주의자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법률을 어기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믿는다.

8) 폭넓은 개혁연대 형성

사민당의 강령은 신구(新舊) 사회운동의 개혁연대를 위한 제안이다. 이 연대의 핵심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노동조합과의 협력이다. 그것은 또한 일상적인 삶의 경험과 새로운 사회운동에의 참여를 통해 근본적 개혁의 불가피성을 절감한 모든 사람들을 포괄한다. 사민주의자는 되도록 많은 집단과 세력의 폭넓은 개혁연대를 원한다. 이윤과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진보라고 주장하는 세력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압제에 맞서 싸우는 데는 다수의 공동의지 형성과 아울러 특수한 집단의 이익이 어떻게 공동선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사민당의 강령은 폐쇄적 도그마가 아니다. 이것을 사민당의 강령

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사민당의 강령은 비판적 대화를 통해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협력과 연대, 비판과 상상력으로 독일사회민주당을 격려하고 강화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호소한다.”

3. 사민당의 기본적인 입장과 정책

사민당은 1959년 고데스베르크 당 대회에서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를 비롯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 강령을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Sozialistische Marktwirtschaft)'라는 이름 아래 시장경제를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로 승인했다. 사민당은 그 이후 독일의 독특한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당의 기본강령 등에 드러나는 시장경제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독일사민당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시장과 계획

시장과 경쟁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고도로 분업화된 산업사회의 생산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는 고도 분업사회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 반면 시장은 수없이 다양한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 선택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 농업과 제조업, 상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공기업과 사기업은 경제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번영하는 국민경제는 기업가적 혁신과 기여를 요구하며, 사민주의자는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장려한다.

기업의 능률경쟁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시장은 경제적, 구조적 변화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시장은 스스로 완전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며 분배의 정의와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도 없다. 그리고 경쟁은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외적 강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 경제주체는 경쟁의 강제를 벗어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며 경쟁을 제한하거나 폐기하려는 내적 경향성을 가진다. 시장과 경쟁은 국가가 설정하는 기본틀 안에서 작동하며, 국가는 시장의 기능과 경쟁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교정해야 한다.

시장과 국가 계획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견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한의 경쟁과 필요한 만큼의 계획!”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은 시장의 효율을 해친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억압하며 국가의 경제정책 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사민주의자는 기업의 '종다양성'(Vielfaltigkeit)을 옹호하며 중소기업을 특별히 지원한다. 물론 대기업 없는 국민경제는 생각할 수 없다.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대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은 중소기업을 종속적 존재로 만들고 기업활동의 정치적 환경을 대기업 스스로 조작하게 만드는 위험한 경향성을 지닌다.

사민주의자는 경쟁이 시장권력을 통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엄격한 경쟁법을 옹호하며 강력한 노동조합이 자본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권력의 정치권력화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와 여론의 힘이다. 사민주의자는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자본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 참여를 통한 기업결합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

2) 국민경제의 민주적인 조절

사민주의자는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을 원한다. 경제성장은 무엇보다도 완전고용과 생태계의 보호,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개입과 조절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촉진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며, 계획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국가는 또한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형성한 다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 활동의 기본 질서와 틀을 규정하며,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부담을 줌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일을 삼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조절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사이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민경제의 구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은 기업의 설립과 이전 등 국가의 경제 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연방과 주 등 각급 정부에 적시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각종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이해관계의 갈등과 조화를 분명히 하고 기업과 정부와 지역의 계획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만들 수 있다.

3) 공기업과 사회적 소유

사민주의자는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개혁을 추진한다. 공기업은 사적 이윤을 위한 시장이 출현하지 않거나 지나친 사회적 위험이 있는 곳, 필연적으로 경제력 집중이 나타나는 자연독점 분야 등에서 필요하다. 공기업은 이윤 추구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반드시 이윤을 낼 수 없는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민주의자는 특히 자구(自救)를 위한 연대와 민주주의적 자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경제적, 법률적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다른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권력의 질서와 경제성장의 질적 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소유는 합목적적이며 불가피하다.

4) 노동자의 경영 참여

물질적 기초가 없는 개인의 자유는 허상에 불과하다. 경제적 기반과 유리된 정치적 민주주의는 반쪽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사민주의자는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 경제 영역에서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노동 현장에서는 작업의 설계와 계획과 진행, 새로운 기술과 조직형태의 도입에 대하여,
- 기업 단위에서는 근로조건과 조직편제, 산업보건, 직능교육과 훈련, 새로운 기술의 응용에 대하여,
- 대기업과 Konzerne의 경우 기업 감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대표권 행사를 통하여,
-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협회와 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권익과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위한 국제규약을 추진함으로써 사민주의자는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엄격하고 효과적인 공정거래법,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분리, 모든 이해 집단의 실질적 경영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는 기업 관련법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자본과 노동의 대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만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노사협상의 자율성은 경제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측의 공장 폐쇄를 불법화해야 한다.

5) 노동자의 생산자본 참여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에 참여하는 것도 경제민주주의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 투자 재원의 손실 없이도 노동자들이 기업 이윤과 자산 증식에서 자기 몫을 가질 수 있으며 생산수단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민당은 노사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

6) 노동시간 단축

독일 사민주의자는 8시간 노동제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하였으며 정규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사민당은 생산성의 향상을 노동시간 단축에 활용하고자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생산설비의 가동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직업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와 문화 생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나아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직업노동에 참여하는 사회에서 직업노동 시간은 더욱 짧아져야 한다. 연대의 원칙에 따라 가사와 육아노동을 남녀가 협력적으로 분담하려고 할 경우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래서 사민당은 정규 근로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사민당의 경제 정책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실업 해소와 완전고용이다. 1998년도 평균 440만 명을 기록한 대량실업은 전임 보수정권이 사민당에 넘겨준 무거운 정치적 유산이다. 사민당/녹색

당 연립정부는 4년의 집권기간에 실업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일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경쟁력 있는 경제는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다. 사민주의자는 독일 경제를 환경친화적, 사회적 시장 경제로 혁신하려 한다. 노동과 환경은 상호 의존한다. 사민당/녹색당의 연정협약은 이를 위한 경제 정책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내수시장 경기와 기업 투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개혁
- 경제의 환경친화적 현대화
- 임금 부대비용 감축, 미래형 상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조세 개혁
- 법정 임금 부대비용 인하
- 교육, 연구개발 및 학술 지원 강화
- 투명하고 친절한 행정을 통한 불필요한 관료적 규제 완화 등 국가의 현대화
- 국제경쟁력을 가진 금융시장의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
- 경제, 재정, 금융, 통화 정책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제 4 장 한국 노동자정당의 현실과 지지기반

1. 노동자정당 발전의 저해요인들

역대 총선에서 사회주의 계열 정당이 얻은 지지를 살펴보면 한국의 친노동자정당이 역대 총선에서 획득한 최대의 지지율 7%를 넘지 못했으며, 그나마 민주화시대에 와서는 2%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의 노동이 정치권 진출에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한국사회의 특수성 문제에 있다지만 너무 중대하고 광범위한 사안으로서 정치적 변수들에 한정할 것이다.

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OECD를 준거로 할 때, 노동당 또는 사회당이 무력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역사적으로 노동계열의 정당은 집권 경험을 갖고 있으며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다. 멕시코의 노동당은 2000년 대선에서 약 17%를 획득하는 등 제3당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미국에 사회당이 실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미국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로 일컬어지는 문헌은 오랫동안 왜 유럽에는 보편적인 현상인 사회당이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제공하여 왔다.⁵⁾

미국이 처음부터 사회주의 정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예외주의’ 문헌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 미국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던 사회주의 정당이 왜 실패하였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미국의 예외성’은 한국의 비슷한 경험을 논의하는데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 서로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만, OECD 가입국 가운데 양국에서만 사

5) 20세기 들어 최초의 본격적 문헌은 쾨바르트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후의 문헌은 쾨바르트의 1906년 논문 Why Is There No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회당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미국사례는 적어도 이론적 준거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문제에 대해서는 100년이 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1) 동서냉전의 이념적 갈등요인

한국에서 사회당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은 냉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있다. 지구상에서 냉전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반도이다. 냉전은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동에게 가장 혹독하게 엄습하였다. 분단이 한국의 노동자정당에게 준 영향은 아일랜드의 분단이 아일랜드의 노동당에 준 영향과 유사하다. 아일랜드는 유럽 국가중 사회당이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아일랜드의 노동당이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대조적으로 미미한 제3당으로 된 이유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민족문제가 압도적 이슈로 자리잡음에 따라 좌우의 문제는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정도는 다르지만 아일랜드의 초기 정당체제는 민족갈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균열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한국의 정당체제 수립은 더욱 극단적이었다. 한민족은 남북권으로 양분되어 전쟁까지 치루었다. 한국의 노동은 해방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활동하려는 순간부터 억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까지 경험한 민족국가의 분단과 그 지속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좌우세력이 완전히 지리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남쪽에서 진보정당의 등장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 마르지 않은 56년 제3대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가 획득한 표는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라는 점에서 조봉암의 실험은 노동자정당의 출현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조봉암이 얻은 23.6%는 분단효과의 절대성을 완화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이후 군사정권에서의 진보적 정당의 실체화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탄압의 역사였으며, 1990년에 들어서 한

국내 민주화의 대두와 동서냉전의 해체라는 국제적 변화속에서 좌우이념적 갈등요인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지만 남북문제에 대한 이념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정치제도의 제도적 제약

노동자정당의 진입장벽으로 정치체제의 제도적 제약이 있다. 첫째는 기성 정당체제는 양대 보수정당 위주로 이미 짜여진 판이기 때문에 노동뿐 아니라 새로이 진입하려는 모든 정당의 진입은 힘들다. 제도적으로 양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사회적 지지를 선점하였거나 아니면 지역주의 등 기득권을 이용해 지지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양당이 모두 보수 또는 중도성향의 정당이라면 노동이익을 대변하는 제3의 새로운 정당의 출현은 마찬가지로 힘들다. 출현은 가능하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 양대 정당이 새로운 정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입법화하기 때문에 노동자정당을 포함한 신생정당은 오래갈 수 없다. 미국은 전형적 예이다. 미국과 같이 정당체제가 일찍부터 성립된 곳에서는 노동은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기 힘들다. 이때의 정당은 노동외의 다른 사회세력을 지지기반을 하여 만들어지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노동과 정당의 관계는 밀착될 수 없다.

이러한 미국식 개방성과 달리 한국에서 노동의 정당화를 가로막는 것은 정당체제의 경직성 또는 폐쇄성이다. 폐쇄성은 제도적인 동시에 카르텔 지역정당체제에서 나타난다. 다수대표제와 1인을 선출하는 작은 선거구로 구성된 선거제도는 양당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다수제와 일회 투표제는 양당제를 선호한다”라는 ‘뒤베르제의 법칙’은 어디에서보다도 한국의 경험을 잘 들어맞는다.

두 번째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각각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의회중심제에서는 국가권력이 단일한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회의 정당분포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권력분립 아래서 정당 간 연합은 중대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통령 권력을 분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수제 투표로 뽑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제3당 후보의 진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전국적 이슈가 중요한 대선에서 다수제 선거를 통해 제3당의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수제는 양당구도의 표 몰이와 결합하여 투표표자로 하여금 제3당 후보에 지지를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낭비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3) 지역균열과 지역갈등

정당체제가 지역으로 쪼개지게 되면 계층에 기초한 지지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노동세력에게 특히 1987년 이후에 불가항력으로 작용하였다. IMF 위기는 한국에게 세계화가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보여주었다. 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급격히 유연해졌다. 실업자와 미조직노동자가 양산되고 기업별노조는 아무런 보호장치를 갖지 못한다. 미조직 노동자의 복지는 노동자정당이 담당해야 한다. 한국의 의회에 노동자정당이 존재하였다면 정부의 사회정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다. 정치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쟁에 기초해야 한다. 각 후보나 정당은 정책을 표방하여 주기적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심판받는다. 한국의 정치시장을 경직되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용인은 지역주의이다. 지역 정당체제의 공고화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 변화를 사전에 봉쇄하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참여 의식을 약하게 만든다. 지역주의적 정치균열은 사회내의 여타 균열을 압도한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경쟁을 가로막는다.

2. 노동자정당의 지지기반

1) 노동시장과 정치시장

시장과 민주주의의 결합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사회당 또는 노동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은 한 사회의 정치적 균열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기능적 균열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는 사회당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15개국 가운데 12개국에서는 사회당이 단독 또는 다른 정당과 연합으로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⁶⁾ 심지어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열악한 남미에서도 오래 전부터 사회당 등 친노동자정당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자는 두 가지 분야에서 시민권을 행사한다. 첫째 노동은 일차적으로 작업장에서의 경제행위를 담당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작업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관철시켜 왔다. 노동은 작업장을 조직화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꾀하여 왔다. 조직화의 형태는 시대 및 국가에 따라 규모나 수준은 다르지만 노동은 언제나 자신에 유리한 조건을 위해 조직화를 추구하였다. 간단히 말해 작업장 민주주의는 노동시장의 민주주의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요구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노동시장은 그 고유한 특성상 국가권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국가제도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노동시장외의 정치시장에의 진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즉 정치시장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동시장과 정치시장의 민주화는 국가별 편차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함을 발견할 수 있다. 정당은 단순한 지지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다. 정당은 역으로 지지집

6) 최근까지 유럽연합 13개국에서 노동자정당이 국가권력에 참가하였으나 오스트리아의 극우정당이 부상함에 따라 12개국으로 감소하였다.

단의 이익을 정의하고 제한함으로써 정치의식을 변화시킨다. 노동계급에게 정당이 중요한 이유는 “정당은 장기적으로 노조를 위시한 노동조직과 더불어 노동계급에게 노동계급의 집단이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또 선택을 주거나 주지 않기도 한다”⁷⁾ 어느 방향에서의 조직화가 먼저 시작되었든, 결국에는 두가지 민주화가 모두 달성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을 포함한 일반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및 노동관계법이라면 정치시장을 규제하는 제도는 선거법 및 정당법이다.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외치는 소리는 많고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법제화되었다.⁸⁾ 그러나 정치시장의 경직성 자체에 대한 비판은 미미한 상황이다. 물론 정치인 부패나 정당 내부 민주화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다른 시장과는 달리 정치시장의 경직성이 바뀌기 어려운 이유는 규제대상자와 규제하는 자가 동일한 정치시장의 특수성에 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체제 내의 기성정당은 배타적 입법권한을 갖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노사만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한편 정치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정당 및 정치엘리트들 자신의 문제다. 기성정당은 정당체제 내부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지만 국외자 또는 신생정당의 도전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이는데 이해가 일치한다. 80년대 후반의 정당체제의 이러한 현상을 카르텔 정당체제라고 부른다. 정당활동에 대한 국고지원 증대현상, 기성정당 위주의 미디어 보도등은 카르텔 정당체제의 징후들이다.

2) 한국노동의 선택

한국 노동자정당의 선택요소는 노동시장의 전국화와 정치시장의

7) Prezworski 1985; 100-101

8) 유연성은 고용 및 해고의 자유 그리고 고용조건을 완화할 의미한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및 파견근로제로 요약된다.

전국화, 선거제도 등 정치시장의 변화, 시민운동과의 외연확대를 말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노동의 선택과 참여가 함께 존재한다. 노동시장의 전국화는 노동이 주 전선을 정치적 진출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는데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 조직화를 위해서 전력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방침이다. 99년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혁운동을 전개한 주체는 노동단체가 아니라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였다.

그러나 기업별노조가 정착된 한국의 현실에서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기존 기업별노조의 양보가 뒤따라야 하고 사용자단체가 조직화되어야 하는 어려운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시장 구조와 거시경제적 변수에 관계된 최근의 학계 논의는 산별조직화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기업별, 산별 및 전국적 협정 등 협상의 지점이나 구조가 전반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산별교섭에 대해 부정적이다.⁹⁾

노동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볼 때 이 노선은 최대강령주의의 악순환을 낳는다. 맥시말리스트의 전략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을 선택하기 보다 현실타파적 전략이다. 현실이란 기업별노조를 말한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거스르긴 힘든 추세임을 감안할 때 수십년에 걸쳐 제도화된 기업별 노조를 깨고 산별노조로 가기는 단기적으로 어렵다. 장기적 프로젝트이다. 노동시장의 전국화 즉 산별화 작업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실현 여부도 불확실하다면 산별조직 후 정치시장의 진출은 더욱 먼 장래의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선택은 한국노동이 정당 건설을 통해 정치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현행의 노동시장의 구조를 인정하되 다른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종적으

9) Calmfors and Driffill 1988

로는 노동시장의 전국화를 획득하는 즉 순순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이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한국노총이 2002년에 민주사회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나 정당제도 하에서 노동세력이 의미 있는 정당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정치시장은 기성 정당에게 유리한 지극히 경직된 체제이다. 정치 엘리트의 입장에서 지역주의적 동원은 동원 비용이 가장 저렴할 뿐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역주의로 4분 5열 될수록 노동의 정치세력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양대 정당구도로 발전해 온 한국의 정당체제는 모든 정당이 캐치 올 정당을 표방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동원하여 왔다. 기성정당 중심의 카르텔 정당체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여론보도의 특혜, 각종 홍보선전의 기회를 독점하여 왔다. 정치시장의 경직성을 낳는 또 다른 요인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라고 지칭되는 지역주의이다. 노동자는 기업별노조를 통해 작업장에서는 조직화되고 있지만 작업장만 벗어나면 정치적 지역주의에 묶여 있다. 동별 향우회가 작동할 정도로 지역주의가 만연된 상황에서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노동으로 본다. 그리고 또한 노동으로서 그들은 매우 전투적이다. 작업장내에서의 일반적 생활은 계급적이다. 작업장 노조에서 그들의 다수는 과격한 봉기에 투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이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체협상 등 현실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분열되는 것이다. 서유럽의 노동계급이 노동자의 계급정당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이다. 노동조합은 정치시장의 경직성을 붕괴시켜 이에 진입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국가정책이 노동계급 전체에 주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동계급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수적이다. 미니말리스트는 정치시장 진입을 통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맥시말리스트가 추구했던 목

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비례대표제의 변화 등 정치시장의 변화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가 해소되기는 하였지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완전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세력의 정치세력화에 가장 현실적 대안은 비례대표제이다. 현실 정치권은 1인1표 다수대표제의 투표행위에 대한 위헌으로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노동세력과 노동자정당은 정치시장의 유연화를 전면에 내걸고 힘을 모아야 한다.

서구의 노동자정당이 정치시장을 조직화해나가는 작업은 투표권 획득이라는 선거제도의 개혁투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제도개혁은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노동시장의 전국화에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상 단위노조가 그리 열성적일 수 없지만, 정치시장의 전국화는 단위노조의 직접적 이해와 상충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시민운동과의 외연확대이다. 제도의 개혁이나 변화는 궁극적으로 정치시장의 내부 행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내부 행위자들인 기성정당은 제도변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런 개혁에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추동자는 기존의 체제 밖에 있는 그룹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기성제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왔던 노동 및 사회세력이 제도개혁을 제1의 개혁과제로 주장하지 않는 한 제도권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 여성, 환경 등 정치시장 외부에 있는 세력이 자유롭게 정치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진정한 시민권 행사를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이 정치시장 조직화라는 전략을 내걸고 나아갈 때 시민운동의 역할은 더욱 힘을 발휘할 것이다.

3) 노동자정당의 지지기반

선진국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동의 조직화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정

치시장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밟았다. 노동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진출 또는 정당체제와의 연계는 보편적이다. 노동과정당의 결합은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는 현상이다. 서구의 노동운동이 결국 정당화로 진행된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노동자정당은 노동자를 작업장 안팎에서 조직화시키고 ‘계급의식’을 형성시키는 주요한 제도이다. 노동자가 아무리 노동시장 내에서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면 국가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노동자정당은 노동조합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사안에 대한 고도의 일관성을 지녀야 하며 또한 노동조합은 조합내의 특수한 이해보다 노동자정당과 그것의 전반적 전략을 지지해야 한다.

두 번째, 노동자정당이 현실적인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청년 실업자 등 잠재적 노동자나 노인과 같은 노동시장 퇴출자 등의 이해를 결집하여야 한다. 노동은 언제나 잠재적 실업상태에 직면한다. 시장체제에 내재한 경기변동이나 불황의 존재는 노동자의 평생 소득을 불균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동자는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 사회정책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노동자의 복지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노동자정당이 없다면 사회정책은 정부의 ‘시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노동법을 위시한 노동제나 노사간의 각종 협약 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회내에 노동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이 없다면 노동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당의 기능은 사회 내 다양한 이익을 조직하고 표출하는 유일한 제도적 통로이다. 그러나 노동자정당이 의회내의 세력이 되는 데는 기성제도의 높은 장벽을 통과해야 한다. 장벽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세력 내부에도 발견된다. 역설적으로 외부장벽은 주어진 조건이라면 내부 장벽은 전략적으로 초월 가능한 것이다.

셋째는 노동자정당이 노동계급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 농민, 빈

민, 지식인, 청년, 학생, 자영업자, 양심적 중소기업인등으로 외연을 확대하여야 한다. 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서 지지 계층에 대한 연대와 동참은 노동자만의 정당이라는 한계를 깨고 대중정당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제 5 장 한국 노동자정당의 이념과 목표

1. 한국 노동자정당의 현실

한국은 두 가지 점에서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여 온 뼈아픈 과거를 안고 있다. 첫째, 통합의 세계사적 조류에 반하여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민족분단 국가이다. 단일국가내에서 냉전이 온존하는 남북분단의 현실하에서 남북의 집권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냉전을 서로 이용해 온 측면이 있다. 분단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제 과거 민족분단으로 인한 냉전적 사고방식과 그 유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로 나아감으로써 한국적 왜곡은 통합의 세계사적 조류 앞에서 극복되어 나갈 것이다.

한국사회의 두 번째 기현상은 오랫동안 노동자정당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노동자정당이 없었다는 사실은 오랜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적 지배가 남긴 후유증이며 이는 세계적 보편현상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운동이후 한국정치에서는 선거를 포함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있다. 적어도 노동계급에 대한 정치적 억압은 줄어들었고, 노동운동의 정치적 공간은 확장되고 있다. 이제 노동운동의 주체들이 실천하기에 따라 의회민주주의는 운동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 노동계급의 역량은 크게 증대하였다. 급속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의 결과, 한국의 노동계급은 더 이상 사회의 주변부 세력이 아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그렇다. 반면, 한국의 노동계급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미조직된 채 표류하는 부동층에 불과하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정책을 포함한 정치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과 민주사회당이 출범함으로써 진보정당으로써의 맹아는 싹터있으나 여전히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정당으로의 확대는 희망적인 사안으로 남아 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운동이 계급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한국 노동자는 지난날의 분절된 의식이나 경제적 조합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더 늦기 전에 노동자정당에 투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계급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 간 작업장 수준에서 기업별 조합주의에 함몰되어 사분오열된 한국 노동자들을 하나의 연대로 조직하는 때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내의 노동자라는 신분과 동시에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동시적 의식을 공유하고 노동자정당의 한 길로 나서야 할 주객관적 정치환경변화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2. 세계사적 조류

오늘날 인류는 끊임없는 기술혁명과 전에 없는 교역의 확대를 통해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로 인해 인간에게는 과거에 비해 더욱 안정되고 부유한 생활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 그러나 기회는 아직까지 불평등한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다. 빈국과 부국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부국은 물론 빈국 내부에서도 빈부차는 악화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사회당이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 노동자정당은 이러한 불평등과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자본의 공세속에 인권훼손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속에서 법과 제도적 보호는 물론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현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앞 다투어 환경 개선에 가장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산업화와 기술혁명은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으며,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빈곤퇴치를 포함하여 경제적 풍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무분별한 산업화는 자연을 훼손하였다.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후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동자정당은 다음 세대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3. 한국 노동자정당의 이념과 목표 제언

한국 노동자정당은 모든 인간이 인간존엄과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 공존하는 사회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민주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의식, 연대, 책임있는 자유 등의 가치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과 역동적 사회발전을 동시에 엮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정당은 자유, 평등, 연대, 평화통일에 기반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민주주의의 이상에 기초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함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여 만들고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뿐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내외적 억압과 강제, 빈곤, 무지 및 미래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나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결정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평등사회는 민주주의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고자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가운데 연대하여 사회결정에 참여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이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평등해야 하며, 평등이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다. 평등이

란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와 평등은 개인적 권리인 동시에 모두에게 가장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집단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협조할 때 자신의 삶을 더 원숙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협조는 공공선이다.

사회적 연대는 이러한 사회적 연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회적 협조라는 공공선은 창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은 상호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좋은 사회는 바로 상호협조, 상호 존중, 배려의 정신 위에서 가꾸어진다.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사회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연대 정신은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다. 역으로 연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려는 이기주의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의 평화통일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 지속되고 있는 냉전을 끊고 민족이 하나되는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쟁을 포함한 남북대결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쌓인 남북의 상호불신은 무력충돌로 발전하기 쉽다. 민족분단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 분단체제 속에서 엮어진 민족 동질성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민족통일은 무력에 의존한 통일을 배척하고 비폭 점진적일 수 있으나 평화로운 방식에 의한 통일만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통일에 대한 외교정책 역시 평화통일에 기반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여러 나라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으로서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와의 우호선린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한국의 노동자정당은 대부분 유럽의 노동계급에 기초한 사민당이 나 노동당과 같은 사회적 지배질서속에 집권을 하고 있기는커녕 그동안의 냉전질서와 기존의 정치시장의 진입장벽이라는 제도적 체제속에서 출범조차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들은 작업장내의 노동자이면서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는 동시적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급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화에 역량을 투여하지 못해 왔으며, 이 또한 분단민족인 한국의 정치지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 세계적인 탈냉전구도와 한국의 민주화는 성숙한 시민역량의 축적속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전면예의 등장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사회당은 그 하나의 전형이다.

모든 민주사회의 정당의 기능은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사회내 다양한 이익을 조직하고 표출하는 제도적 통로로서, 의회내에 노동의 이익을 대변할 노동자정당이 없다면 노동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은 기본적 전제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자정당의 이념과 목표로서 의회민주주의에의 참여속에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청년, 지식인, 양심적 중소기업인을 망라하는 연대하에 보편적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전하고 연대, 평화통일에 기반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자정당의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명세, 노동시장과 정치시장의 교환? 세종연구소, 1998
- 강명세, 한국에는 왜 노동자정당이 존재하지 못했고 또 못하는가?, 세종연구소, 2000
- 김동춘, 유럽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초기과정, 참여사회연구소,
노회찬, 진보정당 건설의 전략과 전망, 노동과 사회(노사연), 1999
- 안재홍,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쇠퇴, 국가전략 통권 제17호, 2001
- 임영일,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경남대, 1998
- 정병기, 유럽 노조-정당관계의 사적개관과 분류의 시도, 한국노동이
론정책연구소, 2001
- 정병기, 독일-이탈리아, 노조-정당관계 비교, 1997
- 정영태, 진보정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황해문화 2000년 겨울, 2000
- 최장집·강명세, “서유럽의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 법문사, 1996
- 최형익, 세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1997

[저자약력]

• 강 명 세

- 고려대학교 문학사
-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
- UCLA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총서·2002 - 06

노동자정당의 이념과 목표에 관한 연구

2002년 12월 21일 인쇄
200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이 남 순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168-24
(代) 02-715-0898

등록 81. 8. 21 (13-31호)

인쇄 (주)성문티디피
(代) 02-2268-0520

가격 : 7,000원